

제도권 속의 진보정당과 한국민주주의 공고화

— 민주노동당의 과제와 전망을 중심으로

정영태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1987년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로 회귀할 위험성마저 가졌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1997년 말 한국정치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공고화의 길로 막 접어들 무렵, 우리는 IMF 사태를 맞았다. 그리고 IMF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신자유주의 또는 영미식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이식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남미형 신자유주의' (또는 종속적 신자유주의)가 사실상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는 심화(deepening) 또는 공고화(consolidation)되기는 커녕 형해화(形骸化, hollowing out)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IMF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거의 모든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외환위기는 극복할 수 있었으나 IMF 이전의 경제체제가 영미식 자본주의 체제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 우선,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보면, 우리 기업들이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상한선(200%)에 묶여 은행으로부터 용자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은행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주식발행을 통해 점

차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주식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초기의 소액주주운동에 힘입어) 주주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발언권(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주들은 주가와 배당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인적자본과 기술개발 그리고 설비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건비 등의 절감을 통한 단기이익의 극대화를 중시하게 되었다. 10%대에 이르는 청년실업,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이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 등과 같은 현상은 우리 경제시스템이 영미식 자본주의로 전환함에 따른 필연적이고 구조적인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없는 성장'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경제가 점차로 외국인 주주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엄청난 국부가 국내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송출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탈규제조치(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외국인 지분인수시 피인수회사의 이사회 의결요건 폐지, 외국인 투자시 재정부장관 허가요건 폐지, 적대적 M&A 허용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에 의한 국내증시와 경영권 시장에 대한 주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말 외국인이 증권거래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총액의 30.1%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 6월 말에는 43.6%로 높아졌다. 우량기업의 경우 그 비중이 더욱 높아 삼성전자(58.6%), 현대자동차(54.9%), 국민은행(76.8%), 포스코(69.1%) 등 주요 우량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상회하여 10대 그룹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48.5%에 달한다. 최근에는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 지분율이 시가총액의 20%를 초과하여 2000년 말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5% 이상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는 2001년 말 52인에서 2004년 6월 말 87인으로 증가했으며, 대상기업은 2001년 말 55개에 비해 171% 증가한 149개사에 달한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최대주

주의 지분율을 상회하는 국내기업이 2002년 말 30개사에서 2003년 11월 말에는 44개로 크게 늘어났다.(대한상공회의소, 2004) 이처럼 점차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높은 배당금을 요구해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그 결과,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내기업들의 설비나 인적자본 또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제조업의 공동화'나 청년실업 또는 비정규직은 바로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높은 배당금 요구를 가능케 하는 영미식 자본주의의 특성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IMF 사태 이후 우리 경제는 점차 외국인 투자자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남미식 신자유주의체제'로 개조되고 있다. 남미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신자유주의하에서는 '참여민주주의'는커녕 접두어를 뺀 '민주주의', 즉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기껏해야 선거에 의한 대표 선출과 정권교체라는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민주주의만이 가능할 뿐이며 그마저도 투표참여율이 점차 떨어져 형해화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생을 잘 보살피 주기를 기대하고 국민의 대표로 선출한 정치인들이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신자유주의의 신봉자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일을 아예 하지 않거나, 신자유주의자가 아닌 정치인들은 국민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압력이나 투자회수의 위협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없어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향상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심화 또는 공고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 영역의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개혁과 함께 '시장'과 '외국자본'의 역할을 절대시하고 신비화하는 종속적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진보정당의 역할과 전망을 살

펴보기로 한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 갖는 의미

민주노동당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은 단지 민주노동당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희망과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IMF 위기를 극복하여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아 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으며, 그나마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임금과 노동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점차로 심화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해 오던 수구정당들은 이러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갖지 못했음은 물론, 민주주의시대에 적합한 정치개혁(군위권위주의시대의 유물인 파쇼적 반공주의, 지역감정, 권위주의로부터의 탈피)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중도보수성향의 새천년민주당 또한 다른 수구정당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수구·보수정당들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은 해방 이후 50여 년 동안 소외되고 억압당한 노동자와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업, 비정규직, 빈부격차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대중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 왔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은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극복 없이는 민주주의의 심화는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인식하에 정치개혁과 사회경제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유일한 정당이었다.

기성정당들은 민생은 제쳐두고 국회에서 정쟁을 벌이거나 선거운동기간 내내 탄핵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데 급급했으나 민주노동당은 한국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정책개발은 물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데 진력을 다해 왔다. 민주노동당이 2002년의 두 차례 선거와 지난 총선에서 '제3당'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역시 이러한 시대적 국민적 요청에 어느 정도 부응함으로써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 이라크파병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공약을 반복하고 민생문제를 시장논리에 따라 해결하려고 하는 등,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민주주의 심화와 민생 챙기기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우선,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민주주의와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문제의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는 한편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나 과거사 청산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침식하는 종속적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열린우리당에서는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도우파에서 중도좌파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충되는 이념과 정책적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심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나마 민주주의를 심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내부 혼란과 혼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민주노동당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은 단순히 진보정당의 미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시대적 역할이 이토록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이 전개해온 의정활동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초기 의정활동

민주노동당은 지난 제17대 총선에서 창당(2000년 1월, 제16대 총선 직후인 5월 31일 재등록) 4년 만에 원내진출과 동시에 국회 제3당으로의 부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직후 처음 치른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1.2%라는 낮은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지만 그 후 2년 뒤에 맞이한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제에서는 8.1%를 얻어 자민련을 제치고 제3당으로 부상했고, 같은 해 있었던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비록 3% 정도의 낮은 득표율이었지만 제3당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난 2004년 4월의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지역구(창원과 울산)에서 2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8석(13% 득표율), 총 10석을 얻어 1960년 7월 총선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원내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¹

1960년대 초반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나타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로 민주노동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정치분야는 물론 사회경제분야와 외교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빈부격차의 해소나 실업·비정규직 해소 등과 같은 사회경제문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었다. 민주노동당 인

1 민주노동당의 성장은 지역구 득표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총 123개 지역구에 후보를 낸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총 91만9천여 표를 얻었는데, 이는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얻은 95만7천여 표에 육박한 것이었고, 7만여 표를 얻은 데 그친 자민련을 크게 앞질렀을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둔 민주당(열린우리당이 분리해 나가기 전까지 제2당)의 지역구 득표율의 1/2수준까지 따라잡았다. 지난 총선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얻어낸 성과는 원내 제3당의 자리만이 아니다. 여기에 덧붙여 (1960년 이후 최초의 진보정당 원내진출이라는 성과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다른 어느 정당보다도 지역색을 많이 탈색한 정당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서 각 정당이 15개 시도에서 얻은 득표율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비교해 보면, 그 비율이 한나라당의 경우 3,450%(대구 62.1/광주 1.8), 민주당의 경우 3,064%(전남 33.7/대구 1.1), 자민련의 경우 7,833%(충남 23.5/광주 0.3)에 달했다. 이에 비해 열린우리당의 경우 그 비율은 301%(전북 67.2/대구 22.3)로 앞의 세 당에 비하면 훨씬 낮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경우 그 비율은 211%(울산 21.9/충남 10.4)로 다른 세 당은 물론 열린우리당보다도 낮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4. 15) 이것은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은 지역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전혀 탈피하지 못했으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지역정당의 성격을 거의 완전히 탈피했고, 특히 후자는 지역정당으로서의 이미지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고착화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천시지부가 인천지역 노동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에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가장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2/3정도가 빈부격차(36.1%)와 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27.6%)가 잘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가 개원하자 곧바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쟁점과 현안에 대해서 하루에도 5~6건씩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동안, 민주노동당은 홈페이지에서 하루 한 건의 논평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응속도가 늦었다. 또한 총선 핵심공약인 부유세 신설과 이라크파병 철회 등도 대통령, 관련 정부부처, 심지어는 열린우리당 소장파들의 반대 내지 '입장선회' 로 민주노동당은 난관에 봉착했다.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이 걸려 있는 민생관련 법안과 비정규직관련 법안의 경우에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² 애써 다른 정당의 일부 의원들로부터 협조를 얻어 제출한 법률안이나 결의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고, 교섭단체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발언권이 무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물론, "의정경험이 부족하고 비교섭단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으며 (...) 정책공조를 통해 각종 현안을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자평도 없지는 않다.((진보정치), 2004. 7.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 지금까지 보여 준 의정활동이 만족스럽다거나 효과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이

2 주책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을 중 개정법률안 등 민생관련 법안은 민주노동당 의원(10명)만으로 발의했고,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등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은 그나마 조금 나왔지만 열린우리당 의원 중 겨우 6명의 협조를 얻어냈을 뿐이다.((진보정치) 제185호, 2004. 7. 12)

부진했던 만큼 기대했던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실제로 총선 직후 한때 20%를 넘어 '제2당'의 자리를 차지했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은 이후 계속 떨어져 6월 말에는 18%, 7월 말에는 다시 13%대로 추락했다.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졌다는 뜻이다.

왜 그랬을까. 민주노동당이 그간 보여준 기대 이하의 의정활동은 자체 평가처럼 "정보의 차단, 경험의 부족, 다수당 중심의 국회운영구조라는 3중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국회운영이 대체로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전체 의석 299석 가운데 겨우 3% 남짓에 불과한 10석을 차지하는 '비교섭단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국정에 관한 정보와 집행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인사와 집단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정치권 '초보자'들로 구성된 민주노동당이 처음부터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것이다.

독일 사민당과 영국 노동당의 경험을 살펴보면 민주노동당이 보여 준 한계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독일사민당 SPD은 한때 1백만이 넘는 당원(2003년 현재 66만여 명)과 780만 명 내외의 조합원(2000년 현재)을 가진 독일노총 DGB과 실질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영국노동당 Labour Party은 한때 40만 명이 넘는 당원(1997년, 2004년 현재 약 21만 명)과 650만 명에 가까운 조합원(2003년 현재)을 가진 영국노총 TUC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게다가 독일사민당과 영국노동당은 원내 과반수 내외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고, 의정활동경험도 수십 년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원하는 대로 입법에 관철시키지도 못하고 사회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혁은 더더욱 실현하지 못했다.

독일사민당이나 영국노동당에 비하면, 국회의원의 숫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은 의정활동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조차 빈약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정당보다 높은 비율의 진성당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숫자는 6만 명이 되지 못한다. 정당 활동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은 이 보다 훨씬 적다. 다른 정당이 갖지 못한 노동조합을 배경에 두고 있지만, 두 노총 조합원을 합쳐도 150만 명 남짓이고, 이 숫자는 전체 노동자의 1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농민조합이나 다른 기층대중조직 회원을 포함하더라도 200만 명을 넘지 못한다. 높은 당비 납부율과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의 국고보조금 때문에 당의 재정 사정은 한결 나아졌지만, 서구의 두 정당에 비견할 바가 되지 못한다.

이처럼 대단히 빈약한 인적 자원과 재정적 기반을 가진 민주노동당이, 그것도 겨우 3%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서구의 사민주의정당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것이다. 독일사민당이나 영국노동당이 '우파사민주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다. 두 정당 모두 신자유주의적 지형 내에서의 부분적인 개혁조차도 자기 뜻대로 입법화하고 집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물며 50년 이상 지탱해온 파쇼적 반공주의의 틀이 해체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막강한 외세를 배경으로 밀어닥친 신자유주의의 거센 바람에 휩싸인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적은 자원을 가진 민주노동당이 국내외 자본가계급과 정치세력들이 함께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개혁을 단시간에 쉽게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반세기 만에 도래한 기회를 주변여건 탓만 하고 헛되이 4년을 보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럴 수도 없다. 진보정당이 아닌 그 어느 정당도 한국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원내 3%의 의석을 가진 소수당인 민주노동당이 한국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대한' 힘의 근원과 효과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거대한 소수’의 힘은 도덕적 헤게모니

소수정당의 ‘거대한’ 힘은 도덕적 헤게모니에서 나온다. 권력을 ‘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각 정당이 국회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 정당이 소유하는 권력의 크기라고 한다면, 민주노동당이 국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3%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회권력의 51%, 한나라당은 40%를 소유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면, 열린우리당은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서 항상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모든 사안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정책의 정당성은 단지 적나라한 힘의 크기(또는 숫자)나 절차적 정당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책은 도덕적 정당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왜곡된 선거제도로 말미암아 국회의석비가 국민의 이익이나 의견의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당과 정치인들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석수로는 미미하기 짝이 없는 ‘미세정당’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을 실현했을 때 기업인들은 물론 정부관료들도 우려했던 것은 ‘전투적인’ 민주노총 등 ‘급진적인’ 사회조직들이 민주노동당의 주요한 지지기반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도덕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동시에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행위를 정착시켰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도덕적 헤게모니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에 덧붙여, 민주노동당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대중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던 것도 도덕적 헤게모니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이러한 도덕적 헤게모니는 '작은 의회권력' 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에게 가장 큰 자산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미 확보해 놓은 도덕적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창당 때부터 실천해 온 당내민주주의와 저비용의 깨끗한 정치관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개발을 계속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난 8월 하순에 있었던 민주노동당 소속 창원시 시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다면, 민주노동당은 가장 강력하고 귀중한 자원인 도덕적 헤게모니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미세정당' 인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수명은 자연히 끝이 날 것이고, 한국민주주의의 미래 또한 암울하게 될 것이다.

최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입법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만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존경은 받겠지만 정치적 지지를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무한정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익과 요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때 이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확보할 수 있다. 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국가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슈나 사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해야 하며, 입법과정에서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 또는 협상력을 길러야 한다.

우선, 어떤 문제에 대한 정책의 입법에 필요한 정보는 작업장이나 생활현장의 실태에 대한 정보, 관련 행정기관의 집행과 대안에 대한 정보, 이 두가지 정보를 포함한다. 전자와 관련된 정보는 일반노동자와 시민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시민으로부터 언제든지 아무리 사소한 문제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의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

와의 유대와 협력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다. 후자, 즉 행정기관의 집행과정이나 행정기관이 개발하고 있는 현행 제도나 정책의 대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관련 행정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공무원노조나 당원인 공무원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발은 단기적인 처방과 중장기적인 처방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특정한 하나의 문제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대증요법'의 성격이 강한 정책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변혁에 해당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단기적인 정책의 결정은 중장기적인 구조변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후자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또한 단기적인 처방이 구조변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된 뒤에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정당이나 행정부의 정책과 비교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갖는 특성이나 차이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진단과 처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대증요법의 성격이 강한 단기적인 정책의 개발은 의원실과 중앙당(또는 광역지부)이 담당하고 구조변혁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은 조만간에 설립될 연구소에서 맡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 민주노동당은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협상력 또는 정치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른 정당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책노선은 민주노동당과 현격히 다르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거의 모든 정책분야에서 민주노동당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기는 하나 국내정치제도나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정책분야를 제외하고는 민주노동당보다는 한나라당과 더 가까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내에는 민주노동당의 정책노선에 가까운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들과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3김

의 정계은퇴 이후 당내경선과 상향식 공천방식이 점차 제도화됨에 따라 개별의원의 자율성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별의원들과의 연대가능성은 이전보다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개별의원의 자율성이 아무리 커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안에서 민주노동당과 연대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적인 제도, 예를 들면 주주중심의 기업지배구조나 금융시스템 또는 경쟁적이거나 착취적인 기업간 관계를 지탱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정책적 입장을 함께하는 의원은 타당에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민주노동당의 정책노선을 공유하는 의원이 있든 없든, 그 어느 경우든 간에 성공적인 입법화를 위해서는 여론조성을 통한 압박전술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정당들이 민주노동당의 핵심적인 정책을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정당들은 국민여론이 들끓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회피하는 '무결정'으로 일관할 것이고,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여론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수렴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뜻'대로 결정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문제를 이슈화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원외정당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킹과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여론조성을 통한 압박전술이 항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카드대란이나 신용불량자 급증 또는 비정규직 및 실업의 급증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일수록 그 문제가 국회에서 의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여 자신의 정책대안을 적극 확산하고 여론화시킬 경우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입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입법화전략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선택과 집

중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주노동당이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서구 사민당은 물론 국내 다른 정당과 비교할 때 대단히 적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또는 핵심적인 목표와 관련되는 정책분야이면서 동시에 적은 자원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를 선정,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인용한 인천지역 노동자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2/3정도가 빈부격차 해소(36.1%)나 실업 및 비정규직 축소(27.6%) 등과 같은 사회경제문제의 '진보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폐해나 심각성 그리고 해결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도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정책분야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치부패의 척결 등 국내정치문제와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 추진 등 군사외교문제의 '진보적 해결'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열린우리당도 비슷한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화에는 용이하겠지만 민주노동당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어려울 것이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협력해야 할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또는 타당과의 차별성은 크게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국내세력만이 아니라 외세도 적극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현재 보유하고 자원으로는 입법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즉 이 두 경우 모두 효율적인 자원사용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빈부격차 해소나 실업과 비정규직의 축소 등과 같은 사회경제문제의 해결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나 금융제도를 포함한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변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민주주의의 심화나 공고화를 위한 과제는 무시되어도 좋

다는 뜻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자유주의의 근본적인 변혁을 수반하지 않는 정치개혁은 그 자체로 아무리 완벽하게 추진하더라도 민주주의를 공고화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상실케 하여 민주주의제도를 형해화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토양 또는 배경적 조건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식민지와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인 친일문제와 국가보안법문제의 해결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를 심화하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전자에 대해서는 과거사 규명보다는 민생경제 살리기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후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산은 단지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과제라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친일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친일행위)을 은폐하기 위해 파쇼적 반공주의를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적인 야당조차도 '용공주의자'로 탄압하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 탈법과 편법 그리고 기회주의적 행태가 팽배하게 된 것도 잘못을 즉각 시정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준법과 인권이 없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은 일반형법조항과의 중복여부를 떠나서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고 야당을 탄압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데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가장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받아 과거사를 재규명하고 국가보안

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노력은 과거사규명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같은 정치개혁에 한정되고 있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민주주의를 그 근저에서부터 침식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시스템은 기업수준에서의 노동자경영참가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정치영역에 국한시키고 그것도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만 국한시키는 다두제polyarchy와 함께 가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한국사회에 이식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남미에 이식된 '중속적 신자유주의'와 대단히 유사하다. IMF 구제금융차관의 조건으로 국내시장을 급속히 개방하고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을 영미식으로 개조함에 따라 외국인 주주들이 제조업체와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권을 장악하여 높은 배당금을 챙겨 본국으로 송금함으로써 남미경제처럼 한국경제도 공동화, 저투자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해외이전이나 저투자는 실업문제와 고용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러한 현상들은 다시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사정의 악화는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내지 무관심으로 전화됨으로써 어렵사리 이룩한 민주주의를 근저로부터 침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국가의 시장개입 자제를 미덕best policy으로 삼고 신자유주의를 신봉하여, 기껏해야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하는 폐해에 대증요법의 성격을 가진 정책만으로 대처함으로써 결국 민생의 위기를 영속화시키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은커녕 오히려 확산시키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증권거래소는 외국인 투자자 집단과 대표 투자자의 금융감독원 신고 제도

를 폐지하고 장외거래의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내에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입법화될 경우 한국증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지배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주주중심 자본주의 즉 영미식 자본주의는 뿌리를 더욱 깊숙이 내리게 될 것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결국 남미가 걸어가고 있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를 맹신하고 있는 정치세력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재벌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려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도 신자유주의를 맹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간단히 말하면, 국회의원의 90% 이상이 신자유주의자라는 뜻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의석수로는 '미세정당'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적 헤게모니, 대중적 기반, 이념의 정당성 등의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은 '거대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진보정당만이 아니라 한국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도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간 실천해 온 당내민주주의, 저비용의 깨끗한 정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활동을 앞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실천하여 한국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

정영태 ytjung@inha.ac.kr | 서울대학교 의교학과 졸업,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박사,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한국정치의 희망찾기』, 『우리 학문 속의 미국』(공저), 『진보정당의 원내진출과 노사관계의 전망』,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System Change in the Age of Neoliberalism』 등이 있다.